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음 10월 15일) 제2175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공공기관 취업 '필기시험 꼭 치러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차 도, 직원 채용 새 지침 마련 정실채용 가능성 미연 차단 면접 위원에 외부 50% 포함

전북도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수요 자 중심의 채용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이 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 재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공공기관의 역량약화를 초래하는 채용비리를 근 절하고자 하는 전북도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 도 공공기관의 채용관련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채용정보에 대 한 접근성 강화 및 채용의 투명성·객 관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도 모하고자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및 행

정안전부 관련 지침(9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출한 최종안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채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도에서 산하 15개 지방공공기 관의 채용 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 월에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한 다

채용계획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을 높이고 기관의 자의적 채용을 줄 여 채용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용정보를 선제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 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공급자중심의 기관별 소규 모 산발적 채용공고 원서접수 가 실 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취업준비생 들의 종합적인 채용공고 숙지가 곤란 하고, 결원발생시 수시채용하는 방식 은 정보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 어 폐쇄적인 채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필기전형은 모든 기관의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 지방공공기관은 채용 규모가 크지 않고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의해 실질적으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 필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정실채용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면접전형은 면접시험위원에 외부위 원을 1/2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기관 내부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외 부위원을 1/2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블 라인드 채용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 여 정실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도 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정하고 내실있는 면접을 위해 면접관들의 사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공고 시 가산점 적용 여부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의 투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도 병 행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편 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금강호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AI' 최종 판정

전북도 "가금농가서 차단방역 수칙 철저 준수해야" 당부

전북도는 지난 13일 군산 금강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AI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가동, 철새도래지 주변 매일 소독, 오리농가 사육제한(47호) 실시,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진성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사회주택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은 포럼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40% 불참

'사유재산' 등의 이유로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의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체 사립유치원 가운데 40%가 참여 하지 929년1

참여가 저조한 일부 지역은 학부모 가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등 불 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꺼리는 이유 는 간단하다.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 는 사립유치원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 공립과 같이 원아 모집을 하면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의 장점인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면에 단점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 입장에서 편의 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회원가입부터 원서접수까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 면 무용지물이다.

2016년에 도입된 '처음학교로'는 유

지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을 온라인 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유치원 등원을 신청하기 위해 온 가족을 동원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처 음학교로'등록 유치원은 국·공립 99.97%(4781곳), 사립 59.88%(2448곳)

비리 유치원 사태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입학 정보 등을 손쉽게 안내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 참여를 촉구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사유재산 등의 이유로 참

여를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 기간을 연장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미참여 유치 원에 대해 특별감사, 운영비 삭감, 정 원 감축 등을 예고했다.

결국 사립유치원 참여 규모는 확대 됐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 서, 미참여 유치원이 많은 지역의 학부모는 직접 신청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역별 시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살펴보면 제주·세종(100%), 광주(98.83%), 충남(94.81%), 충북(87.36%), 서울(86.41%), 전남(86.36%) 등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경북(28.69%), 울산(30.43%), 전북(30.72%), 경남(31.62%), 인천(43.37%), 강원(43.93%) 등은 절반 이하다.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온가족이 새벽부터 나서서 입학설명회를 듣고 입학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한 학부모는 "내년에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시기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더 있기로 했다. 유치원에 보내려 했으나 폐원 등의 우려로 유치원 입학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횟수,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되고 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다면 결국 현장 접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 전국으로 확산

2018 사회주택 포럼

효성 임대료 인상 개입 등 김승수 시장, 정책사례 발표 중앙정부 로드맵 마련 등 다양한 공급 방안도 제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 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 형 사회주택이 정치권과 중앙정부 관계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 자 및 주거복지 전문가에게 소개 됐다.

이에 따라, 부도임대아파트 임차 인 보호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 개입 등 서민들의 주거 권보호에 힘써온 전주시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 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 나실에서 열린 '2018 사회주택 포 럼'에서 유일한 정책사례발표자 로써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 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공기 관과 공기업,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 간사업조직, 협회, 학계 전문가, 연 구자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이 유일한 정책사례 발표 자로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가 청 년들을 위한 동완산동 '전주달팽이 집' 과 팔복새뜰마을 내 사회주택 '추천' 등 다양한 사회주택 공급사 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

또, 지난해 2017 주거복지인 한마 당대회 에서 전국 지자체 중 주거 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내 집 마련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 정을 위한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 시로 인정을 받은 것도 한 몫 했다 는 후문이다.

김 시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주

택공급에서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로 변화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Δ효성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Δ부영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 Δ전국 최초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Δ전국 최초의 주거복지과 설치 Δ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전주시 주거복지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동완산동의 청년달팽 이집, 팔복추천마을 사회주택과 현 재 조성중인 중화산동 여성안심주 택 등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사회주택 로드맵 마련 △사회주택 관련 법률 제·개정 △사회주택기금 마련 지 원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 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 전국 마을 마다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송효철 기자

